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 02-3673-2145)
일자	2015. 09. 10(목)
제목	[보도자료] 경실련, 2015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16대 의제 발표 (총9매)

경실련, 2015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16대 의제 발표

- 노동개혁, 재벌개혁, 서민주거안정대책, 국가가계 부채, 국정원 해킹 사건, 메르스 사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고 등 반드시 다뤄야
- 경실련, 2015년 국정감사 평가 실시

1. 2015년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국정운영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정책국감'으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 올해 국정감사는 현재까지 결정된 피감기관만 780여 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감이 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는 또다시 부실·맹탕 국감이 재현될 우려가 큼니다. 19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매년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 및 피감기관장 출석거부 등으로 '부실·맹탕 국감' 되풀이 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국정감사가 총선용 이슈 제기와 정쟁 등으로 점철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에도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문제, 국가정보원 해킹 사건, 메르스 사태,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 어느 때보다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4.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16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 관련 문제와 롯데 사건 등으로 드러난 재벌 문제에 대한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불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2015 국정감사가 다뤄야 할 16대 의제

1.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2. 롯데그룹 사태·삼성그룹 부당합병 등 재벌 개혁
3. 전월세 문제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4. 가계부채 대책
5. 국가부채 대책
6. 국정원 해킹 사건
7. 메르스 대응 및 개선방안
8.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고
9. 돌고래호 사건 대응 미숙 등 재난안전체계 문제
10. 상고법원 도입 적절성 여부 등 대법원 개혁
11. 해외자원개발외교 실패
1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13. 통신비 폭등 등 단통법 문제
14.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문제
15. UN SDGs 국내 이행방안 마련 점검
16.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5. 정부의 전월세 대책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 대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다가오는 가을에 예상되는 전월세 급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고, 총량규제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심각한 국가부채를 해결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 인상 등의 형평성 있는 증세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6. 국민적 의혹이 많은 국정원의 해킹 사건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 대응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역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메르스 사태 확산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에게 대한 문책 및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 역시 중요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돌고래호 전복 사고 등에서 제대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한 국민안전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난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8.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종 재판을 누구에게 받게 되느냐’ 하는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돼선 안 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9.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이 단말기 구입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리는 **단통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단통법의 시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10.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롯한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행을 시작해야 하는 **UN SDGs의 국내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의 구체적 이행 논의가 필요하며, 이행 방안 마련 준비 실태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5·24조치 해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촉구해야 합니다.
11. 이외에도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비판 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슈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끝>

2015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16대 의제

1.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2. 롯데그룹 사태·삼성그룹 부당합병 등 재벌 개혁
3. 전월세 문제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4. 가계부채 대책
5. 국가부채 대책
6. 국정원 해킹 사건
7. 메르스 대응 및 개선방안
8.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고
9. 돌고래호 사건 대응 미숙 등 재난안전체계 문제
10. 상고법원 도입 적정성 여부 등 대법원 개혁
11. 해외자원개발외교 실패
1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13. 통신비 폭등 등 단통법 문제
14.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문제
15. UN SDGs 국내 이행방안 마련 점검
16.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1.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 임금피크제, 취업규칙변경 및 일반해고지침 등 노동 관련 문제와 롯데 사건 등으로 드러난 재벌 문제에 대한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 문제 속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올바른 대안이 아님. 임금피크제는 실효는 없이 사회적 갈등만을 조장할 수 있어 대안적 임금체계로서 청년실업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취업 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함.
- 특히 취업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입 과정에서 이를 무시함.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민간 기업까지 이어진다면 노·사정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저성과자 등을 해고하기 위한 일반해고지침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음. 이번 국정감사에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지침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비판이 필요함.

2. 롯데그룹 사태·삼성그룹 부당합병 등 재벌 개혁

-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임. 롯데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그룹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서 드러났듯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총수일가의 황제전횡,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 주주들의 권리 박탈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이익을 독점해 왔음. 특히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그간 공정위와 국세청이 평소 소유·지배구조의 파악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관리·감독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방기했음이 드러남. 삼성그룹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대해서는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당합병에 대한 반대를 해야 했음에도 투자위원회 단독으로 찬성을 했으며, 그 어떤 찬성 근거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출범했지만 실제로 재벌들에게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친재벌적 정책들을 펼쳐왔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적극 촉구해야 함. 또한 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 제도 운용과 관련해 관세청이 올해 발표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심사와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임.

3. 전월세 문제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 대책)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함.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주요내용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건설사와 대기업 자본, 집주인 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에 불과함. 정작 심각한 주거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는 '서민주거안정 파괴정책'임.
- 박근혜 정부는 1년 전에도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는커녕 악화되기만 했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9.2 대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에 예상되는 전·월세 급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해야 함. 나아가 부동산거품을 키우고 거품을 후세대와 무주택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빚내서 집사라는 반서민 정책을 철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임.

4. 가계부채 대책

- 1130조원을 넘어선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는 한계에 봉착했고, 해외 전문기관들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음. 이런 와중에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도록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함. 그러나 문제없다던 정부는 지난 7월 22일 총량규제 대신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 한 정책으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있음. 이에 더해 최경환 부총리는 LTV·DTI 규제완화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

- 현재 가계대출은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대출증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또한 주택담보대출로 얻은 자금은 집을 구매하기 보단 생계비로 쓰는 등 질적 악화도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적절성과 113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량규제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임.

5. 국가부채 대책

- 지난 추경예산 편성과 8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된 2016년 예산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GDP의 약 40%, 650조원을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국가채무가 양호한 수준이고 지금은 다소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정부는 지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 임대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부자감세를 통해 세입여건을 악화시켜 재정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정부는 사상 최고치의 국가부채와 계속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을 내놓을 뿐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법인세 인상 등의 형평성 있는 증세를 적극 촉구해야 함.

6. 국정원 해킹 사건

- 국민적 의혹이 많은 국정원의 해킹 사건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 중 하나임. 올해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경위와 국정원의 감청설비 현황, 구매한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 내역 및 법률적 근거 등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임. 나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지지부진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7. 메르스 대응 및 개선방안

-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와 개편방안 및 공공의료확충 방안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 지난 5월 국내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확진 판정 이후 사망 35명, 확진 186명, 격리 1만5천명 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 국가의 감염병 관리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방역지휘체계는 엉망이었고, 민간병원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함.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

더불어 정부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대책 등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어야 함.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8.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고

- 올해 일어난 주한미군의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와 더불어 불평등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 협정(SOFA) 규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증해야 함. 탄저균은 치명적인 생물학적무기이자 고 위험병원체임. 주한미군이 이러한 탄저균을 마음대로 국내에 반입했다는 것이 드러난 지 3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로 배송되었는지, 탄저균 반입 이 얼마나 이루어져 왔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생화학무기 문제는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함.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SOFA 규정 역시 개정을 촉구해야 함.

9. 돌고래호 사건 대응 미숙 등 재난안전체계

- 올해 초 가뭄 대책과 6월의 메르스 사태의 대응, 최근의 돌고래호 전복 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민안전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적 재난사고에 원활한 대응을 하기 위해 기존 소방방재청에 해양경찰청까지 포괄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임. 그럼에도 최근 돌고래호 전복 사고 등에서 나타났듯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체계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음. 내년초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본 사업에 착수하는 국가재난안전망(PS-LTE) 사업의 준비사항 등도 철저히 다루어져야 할 것임.

10. 상고법원 도입 적정성 여부 등 대법원 개혁

-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적정성과 현재 대법원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함. 대법원은 올해 상고법원 신설에 적극 나서면서 대국민 홍보전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까지 강행하고 있음. 그러나 상고법원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무엇보다 사법체계가 바뀌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 대다수가 상고법원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모르고 있음. ‘최종 재판을 누구에게 받게 되느냐’ 하는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됨.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올해 박상옥·이기택 대법관 임명과정에서의 논란과 법원 전반의 전관에 우 등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함.

11. 해외자원개발외교 실패

-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의 책임을 물어야 함. 감사 대상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3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따른 국가적 손실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채가 최대 7배까지 급증했음. 그 결과 이들 3사의 국제적 신용등급은 투자유의 대상으로 전락했음.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함. 최근 ‘2015년 개정교육과정 공청회’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되었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는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임.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함.

13. 통신비 폭등 등 단통법 문제

-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동통신 사업자 간 사실상 목계에 의한 담합으로 기업의 마케팅 비용만 감소시켰을 뿐, 정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상한제 발표 주기인 1주일을 주기로 새로운 소비자차별을 발생시켰음.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이 단말기 구입 가격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피해만 날로 늘어가고 있음. 가계 통신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요금, 통신서비스 품질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함. 또한 실효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통신요금 인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함.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규제 정책을 내세우며 정작 보편적 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외면하고 있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손을 놓고 성과만 치켜세우고 있는 실정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단통법의 시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조속히 제도 개선 또는 폐지에 나서야 함.

14.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문제

- 계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되어 있는 상황임. 하지만 최근 훔플러스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유출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결국 유

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여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유출피해 입증책임 전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이러한 시도의 핵심에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임.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는 등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무분별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이 마련되어야 함.

15. UN SDGs 국내 이행방안 마련 점검

- 새로운 국제사회의 목표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방안 마련에 대한 촉구가 필요함.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기한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 9월 유엔총회 특별정상회담에서는 향후 15년간 국제 사회의 방향을 결정지을 SDGs가 채택될 예정임. SDGs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 모두의 국내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ECOSOC 의장국 등 우리나라가 최근 유엔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비춰볼 때 범정부 차원의 정책의제화로 이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함. 그러나 내년부터 당장 이행을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책임질 컨트롤타워조차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내 실정에 맞는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의 구체적 이행 논의가 필요하며, 이행 방안 마련 준비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16.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촉구

-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제재조치인 이른바 5.24조치로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은 전무한 상황임. 5.24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경협기업의 피해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많음. 지난해 12월 경실련통일협회가 107개 남북경협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4조치 이후 영업 손실과 부채압박 등 기업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무려 93.5%(100개)에 이룸. 또한 2014년 11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남측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89억 달러(우리 돈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북측의 피해액은 22억 달러에 불과해 남측의 피해가 4배 가까이 큰 상황임.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이나 전략은 무엇인지 검증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정상화 방안을 촉구해야 함.